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

2013. 02

하태욱 연구원¹⁾

1 | 서론

- 윤리경영과 환경경영을 지나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책임경영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음
 - 사회적 책임경영은 기존의 재무이익 중심의 경영이 아닌 공동체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
 - 사회적 책임경영은 지속가능경영으로 불리기도 하며 기업에서는 주로 지속가능경영이라 하는 반면 외부 이해관계자(특히 시민단체)는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통칭하고 있음
 - 민간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명성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음
 - 공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민간기업보다 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도 자신의 부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
-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아닌 정부부처에서는 부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1)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어 지표 이행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영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운영정책의 핵심적인 도구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해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임면과 직원들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권장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각 부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부권장정책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 2010년 12월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책임 지표인 정부권장정책 가중치를 2점에서 5점으로 상향시킴²⁾

-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지표인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경영을 독려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경영효율화 지표가 경영효율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책임경영 지표인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부족
 -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효과가 있다면 계속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만약 효과가 없다면 지표 개선 또는 지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석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 평균 변화만으로는 지표 신설로 인한 효과인지 아니면 사회 분위기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경영평가를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외부 영향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지표 신설로 인한 효과를 구분할 수 있음

2)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숍 개최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보도자료, 2010.10.28

2 | 선행연구

- 조택(2007)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
 - 국내외 평가모형인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모형과 유럽의 유럽품질평가모형, 한국품질경영대상 등을 분석
 - 경영평가 개편안에 대해 객관성과 효과성, 효율성, 논리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
- 박용가송영렬(2007)은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지표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강구
 -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인과관계없이 설계되어 있음
 - 중심지표가 없고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중복되어 있음
 - 외부환경과 정부정책 영향요인을 제거하지 못함
- 국회예산정책처(2008)는 경영평가 체계와 지표, 평가단, 환류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지적
 - 경영평가 체계에서는 평가 대상기관 유형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평가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
 - 계량지표 난이도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가중치 확대는 신중할 필요 있음
 - 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 경영개선에 평가결과의 기여가 미흡하고 경영컨설팅 기능의 동시 수행이 어려움
- 조택송선하(2010)는 경영평가가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분석
 - 분석 결과, 경영평가제도가 관리업무비와 인건비, 총인건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경상인원 증감률과 부채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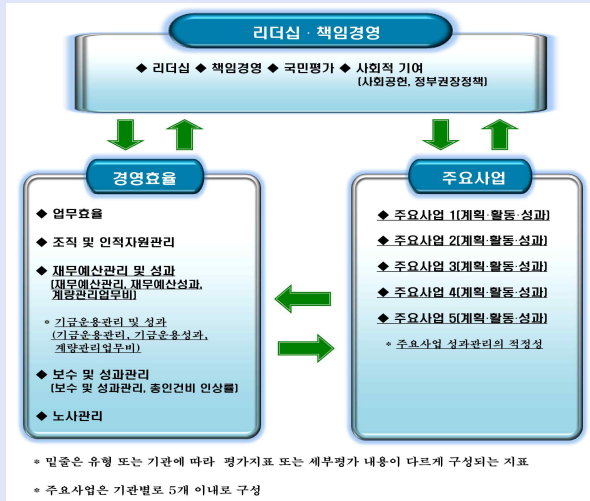
- 유승현(2010)은 경영평가결과를 실증분석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방안을 모색
 -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결과가 나와 평가 신뢰성에 문제
 - 고객만족도 실질 가중치가 낮아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함
 - 평가 부문 간 상관관계가 없고 연계성이 없음
- 라영재·윤태범(2010)은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현황과 구성원의 인식도를 조사
 - 공공기관 54곳에서 UN GC를 가입했고 42곳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책임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시킴
- 라영재(2012)은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법규정을 분석하여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제시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2%로 높은 수준이나 환경분야는 취약한 상황
 - 공공기관 이해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원하는 상황이나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 「공운법」 개정안과 경영평가 개선, 공시 개선 등을 주장

3 | 정부권장정책 지표 현황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크게 리더십·책임경영과 경영효율 주요사업으로 구성
 - 2010년 이전까지 경영평가 체계는 말콤볼드리지(MB, Malcolm Baldrige Quality Award : NBNQA)모델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MB 모델에서 변형된 상태로 기존 모델과 달리 지표 간 연계성이 강화됨
 - 경영평가 지표는 활동을 평가하는 비계량 지표와 성과를 평가하는 계량 지표로 구분

할 수 있음

<그림 1>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 2011

- 경영평가 지표 중에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다양하나 계량지표 중에서는 정부권장정책이 대표적임
 - 리더십과 책임경영, 국민평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이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
 - 사회적 책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사회적 기여로 비계량인 사회공헌과 계량인 정부권장정책으로 구성됨
- 정부권장정책은 다른 경영평가지표와 달리 지표 소관 부처가 지표 설계와 평가를 수행
 - 「공운법」 상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부권장정책은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하지 않고 지표 소관 부처가 평가를 실시
 - 지표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다시 경영평가

단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여 경영평가 때 반영함

- 정부권장정책은 지표의 설계도 소관부처가 담당하기에 지표 개선작업도 소관 부처가 수행함

<표 1> 정부권장정책 변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여성 기업 생산품 및 신기술제품)	중소기업제품(여성 기업 생산품)	중소기업제품(여성 기업 생산품 및 신기술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중소기업제품(여성 기업 생산품 및 신기술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자활용사촌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품 포함)	자활용사촌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에너지이용 합리화(LED조명 보급 포함)	에너지이용 합리화(LED조명 보급 포함)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	청년 미취업자 고용(청년인턴제 포함)	청년 미취업자 고용(청년인턴제 포함)
				단시간근로제 운용 실적
기타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예산조기집행		동반성장 실적

- 정부권장정책 중에는 평가 수용도가 낮은 지표가 존재함
 - 중소기업제품구매 지표의 경우 대규모 시설물 공사가 많은 철도시설공단에서 50% 구매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임
 - 사회적기업제품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기에 지표 달성이 어려움
 - 반면 온누리상품권 구매의 경우 달성이 용이한 지표로 평가 수용도는 높지만 평가 변별력은 낮음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는 2007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평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2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
 - 중소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 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총구매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총구매액의 3% 이상을 구매하도록 법에서 규정
 -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청이 수행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평가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는 2008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국무총리훈령」(559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근거
 - 자활용사촌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 공공기관이 구매한 금액을 평가하여 구매율이 5% 이상이면 만점이고 5% 미만이면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득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는 국가보훈처에서 평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2008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는 2009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와 제6조, 제10조,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근거

- 친환경상품이 있는 품목 중에 친환경상품 구매액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
 - 환경부에서 평가
-
- 에너지이용합리화는 2009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36조(국무총리 지시 제201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0-3호)
 - 에너지절감 실적과 LED 조명 보급 실적을 평가
 - 지식경제부에서 평가
-
- 장애인 의무고용은 2008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근거
 -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평가
 - 고용노동부에서 평가
-
-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은 2008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3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채용 실적을 평가
 - 국가보훈처에서 평가
-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는 2009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방안에 근거
 -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얼마나 많이 채용하는지를 평가
 - 기획재정부에서 평가
-
- 청년 미취업자 채용은 2011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근거
-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청년(만 29세 이하)을 얼마나 채용하는지를 평가
- 정원 3% 청년 채용이 만점
- 기획재정부에서 평가

■ 단시간근로제 운용 실적은 2011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 실적을 평가
- 기획재정부에서 평가

4 | 지표의 효과성 분석

■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친환경상품, 공공기관 청년 채용, 장애인 채용 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

- 지표를 담당하는 부처에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수집을 못한 자료는 제외
-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계량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경영평가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

1. 청년채용

■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2008년과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로 감소되었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

- 2008년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정원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인력 구조 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신규채용은 어려웠음
- 2010년 공정사회가 중요한 국정지표로 설정되면서 공공기관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채용이 증가 추세로 반전된 상황

<표 2>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기업	4,386	1,294	847	1,332	2,585
준정부기관	3,231	3,272	2,128	2,364	4,344
기타공공기관	7,447	6,675	6,142	6,874	7,057
공공기관 전체	15,064	11,241	9,117	10,570	13,986

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 2011년 도입된 공공기관 청년 채용 지표는 청년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청년신규채용이 증가하여 2010년 2.5%에서 2011년 3.3%로 증가
-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4.6% 채용을 유지한 반면 공기업은 0.9% 상승하고 준정부기관은 1.5% 상승하였기에 경영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역금 청년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음
-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신규채용 증가(2011년 신규채용-2010년 신규채용)는 평균 18.5명이고 기타공공기관은 1.1명으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3> 공공기관 정규직 청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2010				2011			
	정원(A)	신규채용	청년신규채용(B)	비율(A/B)	정원(A)	신규채용	청년신규채용(B)	비율(A/B)
공기업	92,489	1,332	905	1.0%	93,753	2,585	1,792	1.9%
준정부기관	6,6942	2,364	1,253	1.9%	71,148	4,344	2,388	3.4%
기타공공기관	86,503	6,874	4,016	4.6%	90,328	7,057	4,192	4.6%
공공기관	245,934	10,570	6,174	2.5%	255,229	13,986	8,372	3.3%

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포함
자료: 기재부내부 자료

- 회귀분석에서도 경영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청년 신규 채용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했다는 결과가 나옴
 - 2010년 청년 신규 채용과 2011년 청년 신규 채용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정원과 경영평가 대상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 2010년에는 경영평가에서 청년 채용 지표가 없었고 2011년에는 청년 채용 지표가 있었으므로 종속변수의 변화와 독립변수의 변화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중차이분석이 됨
 - 교호항을 넣지 않은 모형1에서 경영평가 여부는 청년 신규 채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교호항을 넣은 모형2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임
 - 신규 채용이 정원에 비해할 수 있기에 통제변수로 포함시켰음에도 경영평가는 신규 채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임

<표 4> 경영평가가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

청년 채용 변화		모형1	모형2
경영평가 여부	계수	14.164***	14.476***
	표준오차	4.842	5.264
정원	계수	0.003***	0.004
	표준오차	0.001	0.003
정원×경영평가 여부	계수		0.000
	표준오차		0.003
상수	계수	-0.860	-1.090
	표준오차	3.075	3.430
R ²		0.083	0.080

주: 1. *** 유의 수준 1%, ** 유의 수준 5%, * 유의 수준 10%
 2. 경영평가 여부는 더미 변수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면 1, 기타공공기관이면 0
 자료: 기재부내부 자료

2. 중소기업 제품 구매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책임이 있는 곳은 공공기관만이 아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특별법인 등임
 - 중소기업 제품만이 아닌 공사, 용역 등도 포함되며 총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과 공사, 공사, 용역 등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SOC 공공기관에서 공사 발주를 중소기업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사에 대한 구매비율은 낮고 제품과 용역은 중소기업 구매비율이 높음

- 외부평가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2010년에 중앙정부는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었음
 -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포함한 결과 중앙정부의 구매비율은 공공기관 증가율 1.03%보다 높은 2.27%만큼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5> 2010년과 2011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평균

(단위, %)

유형	2010년	2011년	증감율	t-값
공기업·준정부기관	79.26	80.29	1.03	0.53
중앙정부	62.44	64.72	2.27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3.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구매비율은 변동이 있음
 - 2008년과 2009년에는 친환경상품 구매비율도 증가하고 구매액도 증가함
 - 2010년과 2011년에 구매비율이 하락했지만 구매 대상 친환경상품이 증가한 결과로 2010년과 2011년에도 친환경상품 구매는 계속 증가함

<표 6> 공기업·준정부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친환경상품구매액	95,828	138,495	151,580	168,099	
구매율 산정대상 품목	총구매액	75,212	85,798	108,876	126,728
	친환경구매액	56,580	71,709	87,841	99,380
	비율(%)	75.23	83.58	80.68	78.41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 경영평가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액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지표는 2008년에는 경영평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포함됨
 - 평가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2008년 대비 2009년 구매 비율이 감소했으나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08년 대비 2009년에 구매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구매비율이 아닌 구매액 기준으로 분석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모두 구매액은 증가하였으며 두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기에 경영평가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증가시켰다고 하기에는 어려움

<표 7> 친환경상품 구매 비율과 구매액 평균

(단위, %, 백만원)

구매투입		2008년	2009년	증감	t-값
구매비율	공기업·준정부기관	78.73	84.69	5.96	-3.18
	기타공공기관	66.49	59.07	-7.42	
구매액	공기업·준정부기관	1119	1507	388	-1.56
	기타공공기관	190	231	41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4. 장애인 채용

- 공공기관 장애인 신규 채용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황
 - 2008년에는 신규 채용이 감소된 시기로 장애인 채용 인원과 채용 비율이 감소되었으며 2009년까지 장애인 채용 인원이 감소함
 - 2009년부터 장애인 신규 채용 비율이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는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도 증가

<표 8>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장애인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기업	신규채용	4,386	1,294	847	1,332	2,585
	장애인채용	80	17	17	35	174
	장애인 채용 비율	1.82%	1.31%	2.01%	2.63%	6.73%
준정부기관	신규채용	3,231	3,272	2,128	2,364	4,344
	장애인채용	58	42	50	45	154
	장애인 채용 비율	1.80%	1.28%	2.35%	1.90%	3.55%
기타공공기관	신규채용	7,447	6,675	6,142	6,874	7,057
	장애인채용	65	51	24	76	53
	장애인 채용 비율	0.87%	0.76%	0.39%	1.11%	0.75%
공공기관 전체	신규채용	15,064	11,241	9,117	10,570	13,986
	장애인채용	203	110	91	156	381
	장애인 채용 비율	1.35%	0.98%	1.00%	1.48%	2.72%

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채용에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 장애인 신규 채용에 경영평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음
 - 2008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지표가 경영평가에 도입되었지만 2007년보다 2008년 장애인 채용 인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애인 채용 규모가 급감하여 기타공공기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
 - 만약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다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장애인 신규 채용이 감소되지 않았어야 함

<표 9> 2007년과 2008년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

(단위, 명)

유형	2007년	2008년	증감	t-값
공기업·준정부기관	1.24	0.53	-0.71	2.61
기타공공기관	0.36	0.28	-0.08	

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채용에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7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
- 경영평가가 영향을 주었다면 2008년에 구매액이 증가하였어야 하나 감소하였기에 2011년에 구매액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경영평가가 효과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 2009년에는 기준치가 0.3점에서 0.2점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이 상승하였기에 경영평가로 인해 구매실적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10> 최근 5년 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단위: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326	209	260	483	800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복지부,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 실시」, 보도자료 2012.5.16

- 경영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표가 포함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음
 - 2011년 각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자료를 찾아 분석한 결과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이 평가를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하여 더 높은 상황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
 -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보다 더 낮은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경영평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음

<표 11>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평균(단위, %)

유형	2011년	t-값
공기업·준정부기관	1.98	2.01
기타공공기관	4.29	

주: 구매비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구매액
 자료: 폼드래 홈페이지(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

5 | 결론

-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 신규 채용을 제외한 중소기업제품과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등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중소기업제품과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등은 경영평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 방법 개선이 필요
 -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 채용 지표는 공공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연구에서 분석되지 못한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단시간근로제 운용 실적, 동반성장 실적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증이 필요
- 경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정부부처에서 제출하는 지표가 타당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각 정부부처에서 제출하는 지표를 전부 수용하여 지표수가 증가하게 되면 피평가 공공기관에서는 평가 수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
 - 평가자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표 수 확대에 의해 경영평가의 효과가 분산될 수 있음
 - 타 부처에서 정부권장정책에 지표를 추가하려면 제3자로부터 지표 추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정부권장정책 지표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성과가 있는 지표는 존치시키고 그렇지 못한 지표는 평가 지표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2008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 2007~2012 각 연도
- 리영재·윤태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한계』, 2010
- 리영재,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2012
- 박용기·송영렬,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2007, pp.5~30
- 보건복지부, 「복지부,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 실시」, 『보도자료』 2012.5.16
- 유승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2008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pp.171~202, 2010
- 조택,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편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7, pp.285~313
- 조택·송선하,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3호, 2010, pp.85~108
- 꿈드래 홈페이지 <http://goods.koddi.or.kr/>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alio/main/main.jsp>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index.jsp>